

# 한국환경회의

## 보도자료

일 자	2024. 2. 7	담당자	한국환경회의 (정규석, 010-3406-2320)
수 신	각 언론사 정치, 사회, 환경, NGO 담당기자		
제 목	[보도자료] 22대 총선 낙천 명단 발표_한국환경회의		

### 한국환경회의, 300명 현역의원 대상으로 22대 총선 낙천 명단 발표

- 낙천 대상자 30명 선정하고, 이중 중점 낙천 인사 3명 선정

- 46개 환경단체들로 구성된 한국환경회의는 21대 300명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22대 총선 낙천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우선 환경 악법 대표 발의 건수를 기본 배점으로 두고 기후위기의 표상인 신공항 관련 법률, 1회용품 정책의 전면적인 후퇴인 자원 재활용 관련 법률, 국토 난개발의 신호탄인 강원특별자치도법 등을 중점법안으로 상정해 가중치를 줬습니다. 환경 악법은 한국환경회의의 주요 단체들이 문제 법안을 골라내는 방식으로 확정했습니다.
- 이상의 과정으로 2점 이상인 의원 29명을 낙천 대상자로 선정했고, 여기에 환경단체를 괴담 유포단체로 왜곡 선전한 하태경 국민의 힘 시민사회선진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추가했습니다. 또 30명 낙천 대상자 중 주요 낙천 인사를 별도로 꼽았습니다. 주요 낙천 대상자는 국회의원은 임이자, 하태경, 허영 등 3명입니다.
- 임이자 의원(국민의 힘)은 경유 자동차 판매 금지 유예 법안, 화학물질 관리 완화 법안, 환경영향평가 완화 법안 등 환경규제 완화를 본격화하는 환경 악법 다수를 대표 발의하고 문제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태경 의원(국민의 힘)은 환경단체의 합리적인 지적과 문제 제기를 사실과 다르게 편집해서 괴담 유포단체라는 프레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힘'에 '시민사회선진화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독립적이고 자생적인 시민사회의 본질과 특성을 무시하고 왜곡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토 난개발의 포문과도 같은 강원특별자치도법을 대표 발의함으로써 강원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 국토의 난개발을 불러온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또 지역개발을 위해선 설악산 케이블카가 필요하다는 논리로 법적 보호지역에 대한 몰이해와 구시대적 정책 감각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 한국환경회의는 이번에 발표하는 22대 총선 낙천 대상자를 대상으로 2024총선시민네트워크에서 본격적인 낙천운동과 낙선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 붙임 자료\_ 한국환경회의가 꼽은 22대 총선 낙천 대상자 명단 총 30매 끝.

2024년 2월 7일

한국환경회의

● 공천반대 기준

유례없는 기후와 생태의 위기를 겪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거대 양당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은 기후위기 대응과 생태계 보전, 탄소중립을 위해 사회가 바뀌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음. 하지만 국회의원의 본분인 입법의 영역에서 이들이 보여주는 모습을 보면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아직까지 개발을 우선하는 성장주의적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나며, 그 성장의 이면에서 발생한 기후와 생태의 파괴라는 과거의 과오를 답습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크게 우려됨.

한국환경회의는 21대 국회 총 300명 국회의원의 환경 관련 발의 법안과 발언을 검토하여, 환경의 보전에 심대한 우려를 끼칠 법안의 발의 및 이와 관련된 발언과 같은 활동 일체를 선정하고 이들 국회의원을 ‘반환경 후보자’로 규정함. 한국환경회의는 이들 반환경 후보자를 22대 국회에서 국회의원으로 활동하지 말아야 할, 낙천 및 낙선 대상자로 규정하며 관련 활동을 이어갈 것으로 선언하는 바임.

반환경 후보자로 선정된 기준은 아래와 같음.

-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옹호하거나 찬성하는 법안을 발의, 혹은 관련 발언과 활동을 한 후보자
- 화학물질 규제, 일회용품 규제 등을 완화하여 환경 피해 및 오염을 촉발하고 기업 편의적인 법안을 발의, 혹은 관련 발언과 활동을 한 후보자
- 각종 특별법을 통해 기존 법질서 체계를 무너뜨리고 개발에 대한 무소불위의 권한을 이양하는 등 국토와 해역의 난개발을 불러올 법안을 발의, 혹은 관련 발언과 활동을 한 후보자
- 신공항 건설에 대한 과도한 특혜, 면제 등을 통해 기후위기를 심화시키고 국토 및 해역의 난개발에 앞장선 법안을 발의, 혹은 관련 발언과 활동을 한 후보자
- 규제 혁신이라는 미명아래 환경영향평가 등의 제도를 무력화하고 환경 보전이 아닌 환경 파괴적인 법안을 발의, 혹은 관련 발언과 활동을 한 후보자
- 제도 본연의 취지에 맞지 않는 수정을 통해 환경 보전을 위한 제도의 악용을 유발하는 법안을 발의, 혹은 관련 발언과 활동을 한 후보자

- 에너지 사용량 감축과 재생가능한 에너지 전환 등 에너지 문제 해결의 근본적 대책이 아닌 신규 원전, 소형모듈원전(SMR) 등 원자력 발전을 지원하여 방사능 위협의 지속적 노출을 옹호하는 법안을 발의, 혹은 관련 활동과 발언을 한 후보자
- 개발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 면제, 감면 등을 통해 환경 파괴에 앞장선 법안을 발의, 혹은 관련 활동과 발언을 한 후보자
- 보호지역, 보전산지 등 환경적으로 가치가 높은 지역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우회적 권한을 부여하여 보호와 규제를 위한 법안을 형해화하는 법안을 발의, 혹은 관련 활동과 발언을 한 후보자
- 환경 보전을 위한 시민들의 자발적 결사체인 환경단체의 활동을 폄훼하고 이를 규제하기 위해 시도하는 등 국민의 대변자인 국회의원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법안을 발의, 혹은 관련 활동과 발언을 한 후보자

한국환경회의는 위와 같은 법안의 발의 및 관련 활동을 한 후보자들 중 아래와 같은 기준을 통해 사안의 경중을 판단, 대표적인 반환경 후보자들을 선정함.

- 환경악법을 대표발의한 후보자
- 다수의 환경악법에 공동발의한 후보자
- 다른 환경악법 및 행정 체계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한 후보자
- 국민 정서상 납득하기 어려운 반환경적 활동과 발언을 한 후보자

이상의 기준을 통해 한국환경회의는 구체적으로 환경악법 대표발의 건수를 기본 배점으로 두어 기후위기의 표상인 신공항 관련 법률, 1회용품 정책의 전면적인 후퇴인 자원재활용 관련 법률, 국토 난개발의 신호탄인 강원특별자치도 법 등을 중점법안으로 상정해 가중치를 두고 한국환경회의 주요 단체들이 문제 법안을 골라내는 방식으로 확정함.

이 과정에서 한국환경회의는 2점 이상인 의원 29명을 낙천 대상으로 선정했고, 여기에 환경단체를 괴담 유포단체로 왜곡 선전한 하태경 국민의힘 시민사회선진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추가하였음. 또한 30명 낙천 대상자 중 3명을 주요 낙천 대상으로 꼽았으며, 주요 낙천대상자로 선정된 국회의원은 임이자, 하태경, 허영 등이 선정됨.

한국환경회의는 이번 반환경 후보자 낙천·낙선 명단을 발표가 국회로 하여금 기후와 생태의 위기에 더욱 진정성 있는 자세를 갖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다가올 22대 국회의 구성원이 될 후보자들이 기후위기와 생태계 보전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가지고 이번 총선에 임할 것을 당부하는 바임.

\* 제외 대상자 : 불출마를 선언한 자, 확정판결로 출마를 할 수 없는 자 등

\* 무소속의 경우 '공천반대'는 어렵지만 '부적격자'로 분류해 발표

● 한국환경회의 낙천 명단

- 주요 인물 3인: 임이자, 허영, 하태경

순서	성명 (소속정당, 지역구)	구분(기준)	주요경력	선정사유	구체적인 출처	참고(2016 /2020 전력 등)
1	임이자 (국민의힘, 경북 상주시문경시 )	윤석열 정부 환경 규제 완화 파트너  4대강 사업 찬동 찬핵 환격약법 발의 규제 완화	- 20대, 21대 국회의원 - (현) 환경노동위원회 기후위기특별위 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의 맑은 물 이용을 위한 수질 개선과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 지원이라는 법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수계기금 관련 법 개정안을 다수 대표발의함</li> <li>- 경유 자동차 판매 금지 조치를 유예하여 대기 환경 보전이 아닌 기업의 편의를 살피주는 데 골몰함</li> <li>- 실내 공기질을 관리해야 할 다중이용시설 중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시설에 의무로 시행해야 할 교육, 기록 보존 등의 책임을 면제하는 법안을 발의함으로써 불필요한 법의 사각지대를 만들어냄</li> <li>- 신규 화학물질의 등록 범위를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함으로써 향후 신규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줄 수 있게 하였음</li> <li>- 환경영향평가를 중점, 간이 등으로 구분하여 의견수렴 절차, 평가서 작성, 환경부장관과의 협의절차 등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영향평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함으로써 규제를 완화하고 개발로 인한 환경피해를 가속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함</li> <li>- 윤석열 정부가 '킬러 규제 혁파'를 내세우며 추진하는 환경 규제 완화 에 적극 발맞추고 있음. 문제 입법과 발언을 서슴지않는 등 윤석열 정부 환경 사안 일선의 파트너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 href="#">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a></li> <li>- <a href="#">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a></li> <li>- <a href="#">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a></li> <li>- <a href="#">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a></li> <li>- <a href="#">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a></li> <li>- <a href="#">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a></li> <li>- <a href="#">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a></li> </ul> <p><a href="#">임이자 "文정부, 환경단체와 이권 카르텔 형성...김은경 등 수사해야" - the300</a> "이번 감사원 결과는 문재인 정부가 입맛에 맞는 환경단체들과 이권 카르텔을 형성해 비과학적이고 졸속으로 정책을 추진해 벌인 '제2의 국정농단'"</p> <p><a href="#">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화평·화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아주경제</a> "정부와 한 팀이 되어 윤석열 정부 대표적인 킬러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결과가 오늘 빛을 발했다."</p> <p><a href="#">[성명서] 환경영향평가제도 무력화하는 간이평가제도 도입 반대한다.</a> 임이자 의원 환평법 개정안 관련 한국환경회의 반대 성명</p>	

순서	성명 (소속정당, 지역구)	구분(기준)	주요경력	선정사유	구체적인 출처	참고(2016/2020 전력 등)
					<p>211005 391회 국정감사_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감 “사실은 제일 깨끗한 게 원전 아니에요, 안전성만 확보된다면?”</p>	
2	<p style="text-align: center;"><b>허영</b> (더불어민주당, 강원 춘천시철원군 화천군양구군 갑)</p>	<p>강원특별법 추진  환경악법 강원특별법 대표 발의</p>	<p>- 21대 국회의원 - (현)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p>	<p>- 현행 법체계를 무력화하는 환경영향평가 권한 이양 등의 조항이 담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여 한반도의 주요 산림생태축과 각종 보호구역이 있는 지역에 막대한 환경피해를 줄 수 있는 결정적 단초를 제공함 - 기후생태위기에 대한 무거운 고찰이 없이 그저 강원도의 개발을 위한 규제완화와 특례규정을 마련하며 강원도의 개발은 곧 강원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라는 식의 이야기를 함</p>	<p>1. <a href="#">[2119855]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등 86인)</a>  <a href="#">강원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여야 의원·정당 '환영' 한목소리 연합뉴스</a>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 갑) 의원은 "나라를 위해 다방면의 규제를 감내해온 강원도의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약속을 민주당이 지켰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강원도 핵심 4대 규제를 완화하고 권한을 이양받을 수 있게 된 점과 연구개발특구 지정 및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등 강원도의 신성장 동력을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 최대 성과"라고 평했다.  <a href="#">강원의 특별함은 특별법이 아닌 '녹색과 평화'에서 나온다 한겨레</a> 이름에 ‘특별’이 있건 없건 강원도의 특별함은 녹색과 평화에서 나온다. 하지만 개발과 기업활동의 자유에 중점을 두고 있는 지금의 개정안은 되레 강원도의 녹색과 평화를 위협할 가능성이 크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일인 6월11일에 얽매이지 말고 충분한 숙의와 검토를 해야 하는 이유다.  <a href="#">강원특별법이 뭐길래...환경부와 환경단체가 한 목소리로 반대 경향신문</a> “한국의 허파 역할을 하는 강원도를 난개발하도록 허용하는 법이자 상위법을 무시하는 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특히</p>	

순서	성명 (소속정당, 지역구)	구분(기준)	주요경력	선정사유	구체적인 출처	참고(2016 /2020 전력 등)
					<p>환경영향평가 권한 이양을 포함한 생태계 보호를 위한 법과 관련한 권한을 도지사, 도의회에 이양하는 내용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사실상 현행 법체계를 무력화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같은 개발사업들을 강원도지사, 강원도의회가 마음대로 허가할 수 있게 된다는 우려도 제기된다.</p>	
3	<p>하태경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갑)</p>	<p>시민단체 '선진화'</p>	<p>-19대, 20대, 21대 국회의원 -(현) 외교통일위원회 -(전) 국민의힘 시민단체선진화 특별위원회 위원장 (23년 5월 31 출범-8월 25일 종료)</p>	<p>2022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공익 목적인 보조금 사업의 회계 부정, 목적 외 사용 등 불법적 집행이나 낭비 요소가 있는지 그 실태를 점검하기 바란다”는 발언 이후 정부는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등 시민단체 때리기에 나섬. 2023년 5월, 여당은 이에 발맞춰 국민의힘 시민단체선진화특별위원회를 출범. “시민단체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적 양심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힘. 특히 위원장 하태경은 환경단체를 괴담단체라 낙인찍고, 시민의 안전과 자연환경을 지키기위한 활동을 폄훼함.</p>	<p><a href="#">與 “녹색연합·환경운동연합, 괴담 유포...정부 지원 결격 사유에 가짜뉴스도 포함해야”</a> 하 의원은 “여러 괴담을 유포한 단체를 조사해 보니, 제일 상습적으로 등장하는 단체가 녹색연합과 환경운동연합이었다”며 “환경을 지키는 환경단체 포장을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국가와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괴담 단체였다”고 말했다.</p>	<p>416연대 21대 총선 낙선대상 후보</p>
4	<p>권명호 (국민의힘, 울산동구)</p>	<p>1회용컵 보증금제 무력화</p>	<p>-제21대국회의 원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 원회, 예산결산특별위 원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의 자원 절약을 위해 시행되었던 1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확대를 가로막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함</li> <li>- 기존 법률은 해안에 설치되었던 인공구조물의 사용 연한이 다했을 경우 원상복구 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으나, 해저조광권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원상복구 조항을 삭제하고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하여 결과적으로 해양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파괴함과 동시에 자원 고갈 심화를 부추길 우려가 있음.</li> </u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a href="#">'1회용컵 보증금제' 이지경 만들다니...환경부 무능하다</a>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은 현행 법률에서 대상사업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규모로 지정하고 있는데, 이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과 지역으로 바꾸는 법안이다. 이 개정안을 환경부가 언급한 것은 이 개정안을 토대로 1회용컵 보증금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li> <li>2. <a href="#">해저광물자원개발법 개정발의</a></li> </ol>	

순서	성명 (소속정당, 지역구)	구분(기준)	주요경력	선정사유	구체적인 출처	참고(2016 /2020 전력 등)
					<p><a href="#">"처리수" vs "핵쓰레기"... 여야, 예결위서도 '오염수' 설전</a> 국민의힘 권명호(동구) 의원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 "괴담과 가짜뉴스 확산으로부터 우리 어업인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력하게 주문했다.</p> <p><a href="#">국힘 의원 59명, 2년 전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했다</a>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 규탄 및 오염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촉구 결의안 찬성의원</p>	
5	김성원 (국민의힘, 경기 동두천시연천 군)	오염수 찬동	-제20,21대 국회의원, -(전)산업통상자 원부 간사, -(현)산업통상자 원중소벤처기업 위원회 정치개혁특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긴급한 복구를 명분 삼아 긴급재해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제외하거나 축소시키는 내용이 담긴 환경영향평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함</li> <li>- 22년 8월 동작구 수해복구 현장에서 '솔직히 비 좀 왔음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는 망언을 서슴없이 내뱉음</li> </u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a href="#">긴급재해사업 환경영향평가제외해야....</a></li> <li>2. <a href="#">수해현장에서 막말...김성원 의원</a></li> </ol> <p><a href="#">전통시장 상인들, 국민의힘 만나 "오염수 대신 처리수로"</a>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김성원 의원은 "오염 처리수는 정쟁 영역이 아닌 과학의 영역"이라며 "IAEA의 발표에서도 알 수 있듯 수산물의 안전성은 과학적으로 증명됐다"고 했습니다. 김 의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바다를 오염시키는 건 오염 처리수가 아닌 가짜 뉴스와 괴담 선동"이라며 "국민의힘은 수산업계를 인질 삼는 괴담 선동과 당당히 맞서 싸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p> <p><a href="#">국민의힘 2년전 "오염수 규탄" 지금은 "존중" 왜 변했나 문자 답변은 &lt;정치 &lt; 조현호 기자 - 미디어오늘</a> 조태용·강대식·김기현·김석기·김성원·김태호·박대수·박진·이태규·전봉민·정진석·정찬민·지</p>	



순서	성명 (소속정당, 지역구)	구분(기준)	주요경력	선정사유	구체적인 출처	참고(2016/2020 전력 등)
					성호·최형두·태영호·한무경 등 국민의힘 의원 16인은 지난 2021년 4월29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촉구 결의안'을 발의	
6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병)		-20대, 21대 국회의원 -(현) 환경노동위원회	- 주민의 맑은 물 이용을 위한 수질 개선과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 지원이라는 법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수계기금 관련 법 개정안을 다수 대표발의함	- <a href="#">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a> - <a href="#">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a> - <a href="#">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a> - <a href="#">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a>	
7	김예지 (국민의힘, 비례대표)	환경악법 발의	- 21대 국회의원 -(전)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대표발의 : 맹견 복종 훈련 의무화, 행동 교정 의무화 등 개물림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 부족한 예방 대책 법안 발의 : 현 반려동물 생산/판매업체 제도 전면 개편 없는 생산/판매업체 우수업체 인증 제도 신설 추진 포함	1. <a href="#">[210614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의원 등 10인)</a> 2. <a href="#">[210761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의원 등 10인)</a> 3. <a href="#">2020-12-04 언론보도 '김예지 의원, "견주뿐아니라, 맹견도 훈련받을 기회 제공돼야"'</a>  <a href="#">음식물 쓰레기 비용 증가 → 무상급식 탓?... 진짜 이유는 '돼지 사료' 오마이뉴스</a> 김예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2011년 8월 무상급식 서울시 주민투표 이후 17개 시도가 무상급식을 진행하고 있지만 2019년에만 314억 원의 국민세금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로 쓰였다"면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을 학습교재, 영어 원어민 교사 채용 등에 대체 지원할 수 있도록 보편적 교육복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a href="#">국힘 의원 59명, 2년 전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했다</a>	

순서	성명 (소속정당, 지역구)	구분(기준)	주요경력	선정사유	구체적인 출처	참고(2016/2020 전력 등)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 규탄 및 오염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촉구 결의안 찬성의원	
8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을)	가덕도신공항 추진	-제20,21대국회의원 -(전) 대통령비서실 기록관리비서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 도시재생사업의 핵심은 단순 개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개발 편의 위주의 정책의 일환으로 생태계보전협력기금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자칫 콘크리트 개발로 도시재생의 본래 목적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	<a href="#">김정호 의원, 세계박람회 유치 가덕도신공항 활주로 3800m 2개 필요</a> 김정호 의원은 "부산 가덕도신공항 2029년 조기개항으로 김해공항의 접근성이 낮은 단점을 극복했지만, 사우디 리야드의 킹 살만 공항과 비교해서 공항인프라 격차를 줄이기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a href="#">김정호 의원 '가덕도신공항 추진 역사' 책 펴내 부산일보</a> <가덕도 신공항-노무현의 꿈, 지방균형발전전력을 담다>는 가덕도신공항 추진 과정 전체를 담은 책서에 가깝다. (중략) 김 의원은 가덕도신공항 유치 과정에서 상당한 역할을 한 의원으로 평가된다.	
9	김진표 (무소속, 경기 수원시무)	신공항 추진 성소수자 혐오	- 17, 18, 19, 20, 21대 국회의원 -(현) 21대 후반기 국회의장	- 수원 군 공항 이전과 기업 수출 활성화를 명목으로 경기 남부 신공항 추진에 토대를 만들고자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함 - 법안 주요내용으로 경기 남부 신공항(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특별법안이 적용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됨	1. <a href="#">[2125374]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김진표의원 등 18인)</a>  <a href="#">총선 심판명단 발표... 김우성 '5관왕'에 김진표까지 오마이뉴스</a> 2012년 총선넷 총선심판 명단 민주당에서는 김진표 원내대표가 한미FTA저지범국본, 정교분리준수넷, 조중동저지넷 등의 지목을 받아 유일하게 3회 선정됐다.  <a href="#">"김진표 마음대로 군 공항 이전하나"... 화성시민들 국회 앞 집회 한겨레</a>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이 그렇게 좋은 것이라면, 화성시 땅을 침범하지 말고 수원시가 직접 통합국제공항을 유치하라"고	2012년 총선넷 총선심판 명단

순서	성명 (소속정당, 지역구)	구분(기준)	주요경력	선정사유	구체적인 출처	참고(2016/2020 전력 등)
					<p>반박했다. 양일모 시 통리장단협의회장은 국회에 전달할 호소문을 낭독하며 “수원 군 공항을 화성으로 이전하고, 수원에는 첨단산업을 유치해 막대한 개발 이익을 안겨주려는 김진표 의장의 헛된 야망을 용서할 수 없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김 의장은 화성시민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특별법 발의를 자진 철회하라”고 말했다.</p> <p><a href="#">민주당원 63명, '성소수자 혐오' 김진표에 "사과하라" 미디어스</a></p> <p>김 의장은 지난달 25일 나경원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젊은 분들과 대화해보면 출산 장려 운동에 대해 감성적 저항감을 느끼는 것 아닌가 한다"면서 기독교계에서 '동성애·동성혼 치유회복운동' 등을 생명존중운동으로 승화해서 추진하자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말했다.</p>	
10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을)	차별금지법 반대 남해안권 개발 특례	-21대 국회의원 -(전)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의 맑은 물 이용을 위한 수질 개선과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 지원이라는 법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수계기금 관련 법 개정안을 다수 대표발의함</li> <li>-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는 숙박시설, 음식점 등 건축물에 대한 시설용도 제한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정비지구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은 면제함으로써 환경 보호를 타 법률을 형해화하고 규제를 완화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 href="#">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a></li> <li>- <a href="#">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a></li> <li>- <a href="#">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a></li> <li>- <a href="#">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a></li> <li>- <a href="#">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a></li> <li>- <a href="#">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a></li> </ul> <p><a href="#">김회재 의원, “기후위기 가뭄 대응 패키지법” 대표발의</a> →본래 법안의 취지에 어긋나는 개정안을 홍보하고 있음</p>	

순서	성명 (소속정당, 지역구)	구분(기준)	주요경력	선정사유	구체적인 출처	참고(2016 /2020 전력 등)
					<p><a href="#">[여의도 브리핑] 김희재, 관광도로 정비지구 지정제 도입법 발의</a> →지역 개발을 이유로 규제 완화하기 위한 법안을 홍보하고 있음</p> <p><a href="#">[뉴스파워] 김희재 의원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5년 안에 동성혼 합법화될 것”</a> “21대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고 국민적 대립과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었다.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입법화하여 남성과 여성 외에 제3의 성을 인정하고 동성애자들에게 과도한 특권을 부여하는 법”</p>	
11	<p><a href="#">노용호</a> (국민의힘, 비례대표)</p>	<p>찬핵 인사 오염수 찬동 강원특별법 추진</p>	<p>- 21대 국회의원 - (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 소벤처기업위원 회, 윤리특별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위원</p>	<p>- 원자력 에너지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원자력 관련 산업이 에너지 산업에 포함됨을 명시하고 원자력 에너지 수출을 위한 필요한 지원 근거 마련의 내용이 담긴 법안을 대표발의함</p>	<p>1. <a href="#">[2118501]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노용호의원 등 12인)</a></p> <p><a href="#">노용호, 취소 원전 건설하면 발전비 30조원 절감 전자신문</a> 노 의원은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산업 생태계 파괴, 원전 수출, 기술 개발, 발전비용 절감 등 많은 기회비용을 잃었다”면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 전기를 빌릴 수도 없는 '에너지섬'인 우리나라 현실을 반영해 합리적인 전원믹스를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p> <p><a href="#">한기호·노용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과담, 과학으로 이기겠다" 강원일보</a> 춘천감당협위원장 노용호(비례)국회의원은 "민주당의 과담에 맞설 수 있는 것은 결국 과학이다. 일본을 두둔하려는 것이 아니고 친일파도 아니다"라며 "과학으로 과담을 이기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당원분들께서 명확한 사실을 알고 계셔야한다"고 강조했다.</p>	

순서	성명 (소속정당, 지역구)	구분(기준)	주요경력	선정사유	구체적인 출처	참고(2016 /2020 전력 등)
					<p><a href="#">김진태·한기호·노용호·유상범, 강원특별법 처리 촉구 시위 중앙일보</a> 김진태 강원지사와 한기호·노용호·유상범 의원 등 강원 지역 인사들이 22일 국회 본청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앞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시위를 했다.</p> <p><a href="#">노용호 의원 “강원특자도 성공 과감한 권한이양·특례 필요” ms투데이</a> (국민의힘 노용호 국회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과감한 권한 이양 및 특례 부여, 지원위원회 규정 개정 및 효율적 운영, 4대 규제 우선 해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 밖에도 노 의원은 강원도의 4대 규제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지정, 변경, 해제 도지사 건의 △농업진흥지역의 행정적 권한 특별도지사에게 이양, 지정 절차나 변경·해제 강원도 조례 제정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중 일정 규모 이하 면적 도지사 개발계획 수립 △산지 관리 권한 도지사 이양과 도지사가 산림 이용 진흥지구를 지정 방안 등도 논의돼야 한다고 언급했다</p>	
12	박수영 (국민의힘, 부산남구갑)	SMR 찬성 오염수 찬동 4대강 찬동	-제21대 국회의원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 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에너지 생산 장소를 여러곳으로 나누어 에너지 수송 및 이동에 따른 비효율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지만, 기획위기 시대에 전력 소비를 줄이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오히려 더 많은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음. 따라서 SMR을 여러 지역에 설치하는 수 밖에 없고 원전에 대한 위협에 계속 노출 될 수 밖에 없음</li> <li>- 낮은 경제성과 환경파괴가 우려되는 부산가덕도신공항 추진에 앞장섬. 부산 엑스포</li> </u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a href="#">부산에너지법, 지역균형발전 위한 것</a></li> <li>2. <a href="#">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박차를 가할 것</a></li> </ol> <p><a href="#">국힘 박수영 “국민도 엑스포 실패 책임 있어” 실연에 민주당 “국민한테 책임 전가” 일갈   세계일보</a> 박 의원은 전날인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p>	

순서	성명 (소속정당, 지역구)	구분(기준)	주요경력	선정사유	구체적인 출처	참고(2016 /2020 전력 등)
				<p>유치 실패로 명분이 사라졌음에도 신공항을 계속해서 추진하려 함.</p>	<p>인사청문회에서 “엑스포 실패의 책임을 누가 물을 것인가. 모든 국민이 다 책임 있고, 우리 정치권도 다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는 실언을 했다.</p> <p><a href="#">‘양날의 칼’이 돼버린 분산 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탈핵신문</a> 이번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의 또 다른 문제는 소형모듈형원자로(SMR)을 분산형 에너지로 인정했다는 점이다. (중략) 특별법은 분산형 에너지를 지원하는 특별법이다. 다른 법령에 우선해서 분산형 에너지를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원전 최강국’과 ‘원전 생태계 회복’을 중요한 국정과제로 삼아왔던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핵산업계에 큰 선물을 하나 준 셈이다.</p> <p><a href="#">박수영 "오염처리수 방류,尹정부도 반대...불가피한 결정" - 뉴스핌</a> 후쿠시마 오염수의 방류는 정부도 반대한다"면서 "IAEA 등 국제 기준에 맞게 처리된 오염처리수의 방류는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본다"</p> <p><a href="#">'우리 수산물 안전, 맘껏 드세요'...당정 '소비촉진' 팔걸었다   서울경제</a> 이날 여당 소속의 박수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정동만 의원의 지명을 받았다”며 지역구의 한 횡집에서 수산물을 시식 중인 사진을 게재했다. 박 의원은 “부산의 국회의원들이 횡집을 방문해 식사함으로써 더불어민주당의 과담이 전혀 사실이 아님을 몸으로 보여주고 있다”며 “우리 수산물은 안전하니 맘껏 드셔도 된다”고 말했다.</p> <p><a href="#">與 '日오염수' 국민 대토론회...전문가 "6000억원 노출돼야 기준치 초과"   중앙일보</a></p>	

순서	성명 (소속정당, 지역구)	구분(기준)	주요경력	선정사유	구체적인 출처	참고(2016 /2020 전력 등)
					<p>박수영 의원은 “IAEA 발표가 있었는데도 민주당이 믿지 않고 괴담을 퍼뜨리고 있다”며 “아무런 과학적 근거나 수치 없이 국민 불안만 이야기하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지적했다.</p> <p><a href="#">박수영 "홍수 대책, 지류·지천 정비사업 시작해야...저류조 건설도 시급" 뉴스핌</a>  "4대강 사업 이후 추진하려다 좌파들 반대로 무산된 '지류 지천 정비사업'을 시작해야 된다"면서 "충북 오송 지하철도의 참사도 미호강이라는 지천의 독이 무너져 강물이 순식간에 지하철도로 밀려든 탓"이라 밝혔다."아직도 4대강 사업을 비난하는 일부 좌파들이 있지만 자기 집이 떠내려가도 반대만 하고 있을건지 묻고 싶다"고 일갈했다.</p>	
13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구갑)	가덕도신공항 추진	-20,21대국회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후위기가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수송부문에서 현재 내연기관 차량의 수요 대수를 조절하는 것이 핵심 관건이나, 해당 발의 법안에는 운송 사업 분야의 경유 차량 사용 금지 기한을 24년 1월에서 29년 1월로 미루는 내용이 담겨있음.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18년 대비 40%줄여야 하는 마당에 경유차 유예 기간을 유예하는 것은 쉽게 결정해선 안됨</li> <li>- 노후신도시의 재개발 및 재건축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li> </u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a href="#">경유차 통학버스 및 택배 사용 금지 5년 유예</a></li> </ol> <p><a href="#">인천지역 민주당 의원 9명 '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 공동발의</a>  인천지역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1명 중 9명이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공동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 <p>· <a href="#">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좌진 부정 채용' 의혹 뉴스단파</a>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좌진 부정 채용' 정황이 확인됐다. 박찬대 의원은 과거 자신의 선거운동을 돕던 측근이 감옥에 가자 그를 도와준 지역구 사업가를 보좌관으로 채용했고, 이후 이 측근의 아내까지 비서관으로 채용했다. 지역구 사업가는 '보좌관 자리를 돈 주고 샀다'고 주장하는 문서를 남겼다.</p>	

순서	성명 (소속정당, 지역구)	구분(기준)	주요경력	선정사유	구체적인 출처	참고(2016 /2020 전력 등)
14	서병수 (국민의힘, 부산 부산진구갑)	오염수 찬동	-제16,17,18,19, 21대 국회의원 -(전) 부산광역시장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교 육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천복개로 하천 생태계 파괴 및 수질 악화의 우려로 무분별한 복개를 금지하고 있으나, 하천 인근 주민의 민원 및 재산권 침해라는 명분으로 하천 복원보다 복개의 형식으로 하천 파괴를 주도하고자 함</li> <li>- 무인도서의 개발 권한을 지자체 장에게 넘겨주는 취지의 법을 입법함에 따라 개발로 인한 해양 생태계 파괴에 대한 깊은 검토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있음</li> </ul>	<p>1. <a href="#">악취 및 해충 피해 방지 위한 하천법 대표발의</a></p> <p><a href="#">서병수 "과학적 진실 외면하는 '반국가세력'...일상 돌아가자" 뉴스1</a>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에 대해 "과학적 사실과 진실은 외면한 채 제 욕심을 채우고자 대한민국을 흔들어 댔다. 따지고 보면 이들이야말로 반국가세력"이라며 야권을 겨냥했다. 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괴담선동이라도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정당이라면 그건 민주당만의 비극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비극이다. 천성산 도롱뇽은 여전히 잘 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p> <p><a href="#">[영상] 서병수 의원 "정순신, 법률 지식 최대한 활용한 것에 불과" 발언 논란 미디어오늘</a> 서병수 의원 "정순신, 법률 지식 최대한 활용한 것에 불과" 발언 논란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법조인이 법률 지식을 최대한 활용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본다. 만일 그 과정에서 법적으로 위법이 있었다고 한다면 수사가 개시되고 사법 절차 밟는 것이 순리"</p> <p><a href="#">서병수 "이명박·박근혜 사면 건의를"...홍남기 "대통령 고유권한" 동아일보</a> 서 의원은 "저를 포함해 많은 국민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잘못됐다고 믿고 있다"며 "과연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될 만큼 위법한 짓을 저질렀는지, 사법처리돼 징역형에 벌금, 추징금을 낼 만큼의 범죄를 저질렀는지 보통 상식을 가진 저로서는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p> <p><a href="#">국힘 의원 59명, 2년 전 '후쿠시마 오염수'</a></p>	



순서	성명 (소속정당, 지역구)	구분(기준)	주요경력	선정사유	구체적인 출처	참고(2016/2020 전력 등)
					<a href="#">반대했다</a>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 규탄 및 오염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촉구 결의안 찬성의원	
15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전남 영암군무안군 신안군)	흑산공항 추진	-제20,21대 국회의원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해양생태계 파괴는 고려하지 않은 채 인구 감소를 명분으로 개발 가능한 무인섬을 많이 만들어내고자 함. 이에 개발사업계획을 승인받을 경우 상하수도 및 전기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안이 담겨있음 - 도시개발을 위해 공유매립지에 대한 양도·양수 가액 산정기준 특례를 5년 더 연장하여 난개발의 요건을 로 빠질 우려가 큼	1. <a href="#">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개정안 등 3건 대표발의</a> 2. <a href="#">공유매립지 특례 연장</a>  <a href="#">서삼석 의원, 흑산공항 건립 본격화 이끈 '주역'</a> 서 의원은 그동안 “흑산공항 건설은 주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건설되어야 한다”며 수차례 기자회견과 국회 대정부질의 등을 통해 정부와 정치권에 역할을 강력히 촉구해 왔다.	
16	<a href="#">서일준</a> (국민의힘, 경남 거제시)	환경악법 발의	- 21대 국회의원 -(현)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 가덕도신공항의 조속한 건설을 위해 주변개발예정지역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함 - 지역 개발을 빌미로 기후위기 가속화 및 생물다양성 파괴를 야기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앞장섬	1. <a href="#">[2113150]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의원 등 11인)</a> 2. <a href="#">2023-03-23 언론보도 '가덕도신공항 주변개발지 범위 확대안, 상임위 통과...거제 '공항 배후도시' 기대 첫 걸음'</a>  <a href="#">가덕도신공항 주변개발지역에 거제 포함된다. 거제뉴스아이</a> 서일준 국회의원(경남 거제, 국민의힘)은 가덕도신공항 주변개발예정지역을 반경 10km에서 추가로 확대 지정해 거제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가덕도신공항특별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일반적으로 육상공항은 주변개발예정지역이 공항을 기준으로 반경 10km다. 가덕도신공항은 주변이 대부분 바다로 둘러싸인 해상공항이므로 육상공항과의 주변여건 차이가 확연함에도 주변개발예정지역 범위를 동일하게 반경 10km로 적용하는 불합리함이 있었다.	

순서	성명 (소속정당, 지역구)	구분(기준)	주요경력	선정사유	구체적인 출처	참고(2016 /2020 전력 등)
					<p><a href="#">[논평] 윤석열 정부와 서일준 국회의원, 거제시는 계룡산 수만 평을 파괴해 사곡만 100만 평을 매립하는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a>  윤석열 정부와 서일준 국회의원, 거제시는 계룡산 수만 평을 파괴해 사곡만 100만평을 매립하는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이름만 국가산단이고 사실은 1조8천억 민간투자사업으로, 승인할 경우 바다와 산만 파헤치고 흉물로 전락한다.</p>	
17	<p>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p>		<p>-21대 국회의원  -(전) 서울시 행정1부시장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대적으로 처리비용이 저렴한 지방으로 폐기물이 편향될 문제가 있으며 산업단지 외부 폐기물로 인해 인근 지역 주민들에 대한 고통을 유발할 수 있는 개정안을 다수 대표발의함</li> <li>- 새만금 환경을 파괴하는 새만금사업에 대한 특별회계 설치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개정안을 대표발의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 href="#">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a></li> <li>- <a href="#">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a></li> <li>- <a href="#">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a></li> <li>- <a href="#">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a></li> </ul> <p><a href="#">윤준병 의원,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법' 대표발의 - 전주일보</a>  “새만금 개발사업은 대규모 재정이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국책사업이자 개발 이후 재생에너지와 관광 등의 발전을 통해 자체 자원 조달과 수익 재원의 재투자가 가능해 특별회계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되는 만큼 개정안을 발의했다”</p> <p><a href="#">與 윤준병 "미투처리 모범...2차가해 막으려 죽음으로"</a>  박원수 미투 관련 발언 논란</p>	

순서	성명 (소속정당, 지역구)	구분(기준)	주요경력	선정사유	구체적인 출처	참고(2016 /2020 전력 등)
18	<p style="text-align: center;"><a href="#">이양수</a> (국민의힘, 강원 속초시인제군 고성군양양군 )</p>	<p>설악산케이 블카 추진 강원특별법 추진</p>	<p>-제20,21대국회 의원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 윤리특별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영향평가 축소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같은 독소조항이 담긴 강원특별법 통과를 위해 큰 기여를 하였음. 생태보존의 시각보다 개발의 시각으로 지금까지 유지되어온 여러 환경 보호 구역을 개발을 용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으며, 백두대간 및 자연 훼손에 대한 대책 없이 개발 논리에 치중되어있음.</li> <li>-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추진 대표 인사</li> </ul>	<p>1. <a href="#">강원특별법 국회 통과 촉구 인사말</a></p> <p><a href="#">이양수 "8년만에 강원특별자치도 출범...도민과의 약속 지킨 시간"[총선사] 이데일리</a> 21대 국회가 약 4개월 남은 가운데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41년간 숙원사업이자, 2026년 상업운전을 목표로 착공에 들어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의 차질없는 공사 추진을 위해 힘을 쏟을 방침이다.</p> <p><a href="#">이양수 의원 "친환경 오색케이블카 추구" G1 착공식까지 했지만, 환경단체는 허가를 내준 국립공원공단을 상대로 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반발하는 등 환경 훼손 논란은 여전합니다.이양수 의원은 기초 공사부터 케이블카 운영 방식까지 전 과정을 친환경적으로 추진해 환경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a></p> <p><a href="#">이양수의원 오색케이블카 환경부 부 동의 할 수 없도록 개정법률안 발의 전국매일신문 (19년 10월) 24일 이 의원에 따르면 "법률의 위임범위를 넘어 환경부 예규에 규정돼 있던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결과 중 권한 남용에 해당하는 '부동의'를 제외하고 '동의' 또는 '조건부 동의' 중에서 협의 결과를 통보도록 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a></p> <p><a href="#">이양수 원내대변인 "탈원전 정책 폐기 말고는 답이 없다" 연합뉴스</a> "탈원전이 지속하면 조만간 원전 기자재 공급망도, 신규 원전기술 인력양성 시스템도 붕괴할 것이다"라며 "탈원전 정책이 오히려</p>	

순서	성명 (소속정당, 지역구)	구분(기준)	주요경력	선정사유	구체적인 출처	참고(2016 /2020 전력 등)
					<p>‘원전 안전을 위협하는 정책’이 된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탈원전 정책 반대 서명이 30만 명을 넘어섰다”며 “탈원전 정책 폐기 말고는 답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아울러 청와대와 정부를 향해 “하루라도 빨리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에 대한 공론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p>	
19	이주환 (국민의힘, 부산 연제구)	4대강 찬동  폐기물 소각 처리 적극 지원	<p>-21대 국회의원 -(현)국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기후위기특별위 원회</p> <p>-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각열에너지 개념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논의 및 검증 없이 법적근거를 두어 폐기물 처리에 소각 방식이 집중될 수 있는 우려가 되는 법률 대표발의함</li> <li>- 화학사고를 유해화학물질로만 한정 일반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 사각을 유발할 수 있는 법안을 대표발의함</li> <li>- 민간 사단법인에 대해 자금을 지원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함으로써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특정 법인의 이익에 골몰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 href="#">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a></li> <li>- <a href="#">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a></li> <li>- <a href="#">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a></li> <li>- <a href="#">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a></li> </ul> <p><a href="#">[단독]초중고 환경 강사진 ‘반 정부·4대강’ 활동가 대거 포함 :: 문화일보 munhwa</a> 이주환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과 환경의 중요성을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해 환경교육이 의무화되었지만, 정치색을 띄거나 한쪽으로 치우친 환경운동을 펼친 강사들이 적합한지 의문” → 4대강, 오염수 반대 운동을 반정부, 정치색으로 폄하, 환경강사에 대한 부적절한 문제 제기</p> <p><a href="#">[단독] 文 정부 4대강 보 해체하느라 2026년까지 최소 2680억 든다</a> 이주환 의원은 “말썽한 보를 해체한다며 세금을 낭비한 데다 일단 시작된 사업은 중단이 어려워 예고된 지출을 줄이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p> <p><a href="#">국힘 의원 59명, 2년 전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했다</a>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 규탄 및 오염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촉구 결의안 찬성의원</p>	

순서	성명 (소속정당, 지역구)	구분(기준)	주요경력	선정사유	구체적인 출처	참고(2016 /2020 전력 등)
					<p>221004 400회 국정감사_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감 “보를 해체하거나 개방하면 완전히 녹조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말씀이지요?”</p>	
20	<p><a href="#">이현승</a> (국민의힘, 부산 부산진구을)</p>	<p>가덕도신공 항 추진 오염수 찬동</p>	<p>- 19, 20, 21대 국회의원 - (현)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p>	<p>- 가덕도신공항의 조속한 건설을 위해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을 설립하자는 내용의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안’을 대표발의함 - 기후위기 가속화 및 생물다양성 파괴를 야기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앞장섬</p>	<p>1. <a href="#">[2119713]</a> <a href="#">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안(이현승의원 등 15인)</a> <a href="#">가덕특별법 순항 이끌 ‘키맨’은 이현승 의원 부산일보</a>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순풍을 타게 하는 ‘키맨’은 국민의힘 이현승(부산진구을) 의원이다. 그가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이자 야당 간사이기 때문이다. 특별법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트랙에 제대로 실어 종착역인 본회의 의결까지 가게 하는 핵심 인물인 것이다. 어느 때보다 그의 역할이 주목받는다.</p> <p><a href="#">"오염수 정책기조, 전·현정부 똑같다" vs "총리, 일본 대변하나" 뉴스1</a> 이현승 국민의힘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기도 전에 (민주당은) 괴담부터 유포해 당장 횡집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민주당이 부산 서면에서 집회를 하는 바람에 애꿎은 부산 횡집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p> <p><a href="#">국힘 의원 59명, 2년 전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했다</a>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 규탄 및 오염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촉구 결의안 찬성의원</p>	

순서	성명 (소속정당, 지역구)	구분(기준)	주요경력	선정사유	구체적인 출처	참고(2016 /2020 전력 등)
21	정동만 (국민의힘, 부산기장군)	가덕도신공 항 추진 오염수 찬동	-21대 국회의원 -(전) 제6대 기장군의회의원 (전) 제7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현) 국토교통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저조한 수익과 환경파괴가 우려되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토지와 물건 등의 수용에 대한 사업자 편익, 특혜를 줌</u></li> <li>- 개발사업 시행자 대한 자금 지원, 조세 감면, 특별회계 설치, 등 개발사업에 대한 과도한 특례로 환경 피해가 우려되는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 href="#">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a></li> <li>- <a href="#">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a></li> <li>- <a href="#">남부권 개발 특별법안</a></li> </ul> <p><a href="#">[국회25시]정동만 의원 애쓰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국회 본회의 통과"</a> “앞으로 남은 과제들도 잘 해결해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2029년 12월에 가덕도신공항이 반드시 조기 개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p> <p><a href="#">'수산물, 마음 놓고 드세요'...與, 오염수 공포에 '횡집 시식' 캠페인   서울경제</a> 정동만 의원은 지난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횡집에서 물회를 먹은 사진을 올리며 “근거 없는 허위, 과장된 과담에 수산물 소비가 감소하고 있다. 수산업 종사자 및 시장 상인들의 생계는 위기에 몰리고 있고, 국민 불안도 가중되고 있다”며 우려했다.</p> <p><a href="#">국힘 의원 59명, 2년 전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했다</a>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 규탄 및 오염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촉구 결의안 찬성의원</p>	
22	정운천 (국민의힘, 비례대표)	4대강 찬동 오염수찬동 전북특별법	-20대, 21대 국회의원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현)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파괴가 예상되는 산악열차 등에 대한 설치 문제가 이따르는 친환경산악특구지정, 국립공원 및 도립공원 개발 권한과 환경영향평가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여 국토의 모든 생명이 함께 누려야 할 산림 파괴를 용인하는 전북특별법을 대표발의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 href="#">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a></li> <li>- <a href="#">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a></li> <li>- <a href="#">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a></li> </ul> <p><a href="#">국힘 정운천 "수습 잘하면 의원 되고"... "참사가 임신양명 기회냐"</a></p>	

순서	성명 (소속정당, 지역구)	구분(기준)	주요경력	선정사유	구체적인 출처	참고(2016 /2020 전력 등)
			위원회		<p>2008년 ‘광우병 사태’ 당시 농림수산물식품부 장관을 지낸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향해 “(이태원 참사를) 확실하게 (수습)하고 책임지고 나오면 저같이 이렇게 국회의원도 되지 않냐”고 말했다.</p> <p><a href="#">빗물이 눈물된 섬진강..."4대강 사업 확대했더라면"</a> 정운천 의원은 "섬진강도 (4대강 사업을 통해 강바닥을) 파냈더라면 결과적으로 홍수 피해가 줄어들었을 것"</p> <p><a href="#">정운천 의원, "15년 전 광우병 사태 똑 닮은 거짓 선동 대한민국 국격 무너뜨려" 일침</a>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거짓 선동’으로 글로벌 중추국가로 거듭난 대한민국의 국격을 더이상 실추시켜서는 안 된다”</p> <p><a href="#">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앞서, 환경 오염 우려는?</a> 정운천 의원 발의 전북특별법 문제</p>	
23	정희용 (국민의힘, 경북 고령군성주군 칠곡군)	노후원전 수명연장	-제21대국회의원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긴급한 복구를 명분 삼아 긴급재해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제외하거나 축소시키는 내용이 담긴 환경영향평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함</li> <li>- 개발제한구역 내 사찰의 유지보수를 위해 편의시설 등의 건축을 허용하게 하여 자칫 기존 전통 사찰의 훼손 및 목적과 다른 개발 용도로 악용될 우려가 있음</li> <li>- 핵발전소의 설계수명이 만료되었더라도 운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원자력 안전법을 발의함.</li> </u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a href="#">긴급대응때 환경영향평가 제외해야...</a></li> <li>2. <a href="#">개발제한구역법 일부 개정안 발의</a></li> </ol> <p><a href="#">원전 운영 허가 지연으로 경북지역 지방세수 1천140억원 감소 매일신문</a> 정희용 의원은 "원자력은 저탄소 에너지원으로 그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면서 "신한울 1호기 허가 지연에 따른 보상 방안 마련, 신한울 2호기 조기 가동을 위한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고 말했다.</p> <p><a href="#">국회의원 정희용, 원자력안전법</a></p>	

순서	성명 (소속정당, 지역구)	구분(기준)	주요경력	선정사유	구체적인 출처	참고(2016 /2020 전력 등)
					<p><a href="#">발의 더퍼블릭</a>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부작용을 막기 위해 원자력 발전소의 설계수명이 만료되었더라도 철저한 안전성 확인과 평가를 거쳐 운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p> <p><a href="#">與 "이태원법 거부권, 野 정치공작 맞선 불가피한 선택" 연합뉴스</a> 정희용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윤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재난의 정쟁화를 유도하는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를 깊은 고민 끝에 받아들였다"며 이같이 말했다.</p> <p><a href="#">국힘 의원 59명, 2년 전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했다</a>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 규탄 및 오염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촉구 결의안 찬성의원</p>	
24	주호영 (국민의힘, 대구수성구 갑)	신공항 추진	-제17,18,19,20, 21대 국회의원 -기획재정위원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을 통해 감세, 예비타당성 등 각종 특례를 줄 수 있도록 규정하여 환경영향평가가 무력화될 수 있는 여지를 남김. 심각한 생태계 파괴와 예산 낭비가 우려되는 대규모 토건 사업인 신공항에 대한 진지한 고찰없이 단순 개발 중심의 정책에 몰두함	<p>1. <a href="#">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 제정에 모든 힘을 쏟겠다.</a></p> <p><a href="#">환경파괴·국고낭비·안전논란 불구 정부는 '또 공항' 불통 - 경향신문</a>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특별법은 지난해 8월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국비지원과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등이 주요 내용이다. 김주영 한국교통대 교수"지자체들이 공항 시설·증설에 열중하는 것은 국비가 100% 투입되는 데다 지역민들에게 생색을 낼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국내의 경우 인구 규모에 비해 공항이 너무 많이 건설되고 있는데 이렇게 막대한 돈이</p>	



순서	성명 (소속정당, 지역구)	구분(기준)	주요경력	선정사유	구체적인 출처	참고(2016 /2020 전력 등)
					<p>들어가면 미래세대가 재정 부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에도 이를 특별법 등의 이유로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p> <p><a href="#">[심층분석] '밀 빠진 독' 뺀 지방공항, 누가 추진하나</a> 기존 공항 15곳 중 10곳이 적자... ‘공항경제권’ 앞세우지만 본심은 ‘선거용’ 그러나 대한교통학회가 박사학위자와 기술사 자격증 소지 회원 15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66.6%(102명)는 “대구·광주의 군공항 이전 특별법 등을 통해 예타 면제를 추진하고 민간공항의 사업비 부족분을 정부가 지원토록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p> <p><a href="#">"오염수, 국민이 먹게 될 지경"... 국힘의 놀라운 옛 논평</a> 2021년 4월 주호영 당시 당대표 권한대행 및 원내대표 역시 "일본 따위에게 오염수 방출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할 수 있는 어떤 빌미도 우리가 먼저 제공해선 안 될 것"이라면서 "일본의 무례와 외교적 결례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국민께서 강력한 항의와 경고를 보내야 할 것"이라며 일본의 방류 결정을 비판하고 정부와 국민의 항의와 경고를 촉구했다.</p>	
25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을)	수계기금 법안 개정	-19대, 21대 국회의원 -(전)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현)환경노동위 원회 예산결산특별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의 맑은 물 이용을 위한 수질 개선과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 지원이라는 법 본래 취지를 훼손하는 수계기금 관련 법 개정안을 다수 대표발의함</li> <li>- 보전산지는 산림자원조성과 자연생태계보전 등 산림의 공익기능을 위해 지정하는 구역으로 산지관리법에 의해 관리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변경 또는 해제하고 공항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 href="#">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a></li> <li>- <a href="#">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a></li> <li>- <a href="#">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a></li> <li>- <a href="#">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a></li> </ul>	

순서	성명 (소속정당, 지역구)	구분(기준)	주요경력	선정사유	구체적인 출처	참고(2016 /2020 전력 등)
			원회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함	<p><a href="#">잠자던 '수계기금'... 가뭄·홍수 피해에도 폭넓게 쓴다</a> 문제는 이 수계기금 용도가 '수질개선'에 한정돼 있었다는 것이다. 물 관리 주체가 환경부·국토부로 이원화돼 있던 2018년 이전까지 환경부는 '수질', 국토부는 '수량'을 관리했다. 환경부 소관이던 수계기금은 '수질 관리'에 쓰였다. 그런데 2018년 물 관리 주체가 환경부로 통합됐는데도 수계기금 용처는 여전히 수질 관리에 묶여 있었다. →본래 법안의 취지를 잘못 비판하고, 개정안에 명분을 주는 기사임</p>	
26	<p><a href="#">추경호</a> (국민의힘, 대구 달성군)</p>	4대강 찬동	<p>- 20, 21대 국회의원 - (전) 윤석열 정부 1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p>	<p>-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안'에는 산업단지 조성 등 개발을 위해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등으로 부터 안전한 공항 건설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겨있지만, 이는 기후생태위기에 대한 위기의식 부족으로 보임. - 해당 특별법안에는 신공항 사업에 필요한 특례 및 규제 완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p>	<p>1. <a href="#">[2107745]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안(추경호의원 등 24인)</a></p> <p><a href="#">추경호 "내년 재난대응 예산 확대...포스트 4대강도 반영" 연합뉴스</a> 4대강 사업을 지류와 지천까지 확대하는 '포스트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국가가 해야 할 몫에 관해 협의해 필요한 예산을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p> <p><a href="#">추경호 "4대강 보 개문으로 330억 혈세 버려졌다" 매일신문</a>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추 의원은 이날 별도의 자료를 통해 "현 정권 출범 후 4대강 보수문을 열고 진행한 모니터링 작업만으로 지금껏 330억원의 소수력발전소 발전 매출 손실을 봤다"며 "앞으로 16개 보를 모두 해체할 경우 연간 600억원의 손실을 보게 된다"고 말했다.</p> <p><a href="#">추경호, 내년 오염수 관련 예산에 "불안감 없으면 안 써도 될 돈" KBS뉴스</a>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일본</p>	

순서	성명 (소속정당, 지역구)	구분(기준)	주요경력	선정사유	구체적인 출처	참고(2016 /2020 전력 등)
					<p>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 예산이 올해보다 40% 이상 증가한 이유에 대해 “불안감과 심리적 동요가 없으면 안 써도 될 돈인데 상황이 그렇게 가니까 정부가 그것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p> <p><a href="#">국힘 의원 59명, 2년 전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했다</a>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 규탄 및 오염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촉구 결의안 찬성의원</p>	
27	최인호 (더불어민주 당, 부산 사하구갑)	가덕도신공 항 추진	-20대, 21대 국회의원 -(전) 대통령 비서실 국내언론비서관 -(현)국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 <u>대규모 환경 파괴가 우려되는 가덕도 신공항 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 사업의 편의를 강화하는 법안을 다수 대표발의함</u>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 href="#">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a></li> <li>- <a href="#">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a></li> </ul> <p><a href="#">최인호 “가덕신공항 ‘종합사업관리’로 조기 개항 관철”...관련 법안 발의 - 부산일보</a>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가덕신공항의 2029년 개항이 차질없이 진행되길 바란다”</p> <p><a href="#">‘가덕신공항 추진 키맨’ 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 3선에 도전</a> 최 의원은 지난 2월 가덕신공항 건설공사의 조기 착공을 위해 보상 절차를 앞당기는 법안을 발의(중략)가덕신공항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p> <p><a href="#">PK 예비후보 10명 중 4명 전과자...‘음주운전’ 이력 13%나 보유 - 부산일보</a> PK예비후보 10명 중 4명 전과자...‘음주운전’ 이력 13%나 보유</p>	

순서	성명 (소속정당, 지역구)	구분(기준)	주요경력	선정사유	구체적인 출처	참고(2016/2020 전력 등)
28	<p style="text-align: center;"><a href="#">한병도</a> (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시)</p>	새만금 개발	<p>- 21대 국회의원 - (전) 문재인정부 대통령 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 - (현)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장</p>	<p>- 개발사업 요건의 완화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등 보수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중앙정부의 권한을 자치권 보장이라는 명목으로 지방 이양하고 특례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함 - 지방 권한 이양 이후 전북 지역 그린벨트 지역, 녹지 등 보호구역에 대한 난개발 우려가 있음</p>	<p>1. <a href="#">[2124084]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한병도의원 등 23인)</a></p> <p><a href="#">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의 일등공신... 정운천·한병도 전북도민일보</a></p> <p><a href="#">새만금 죽이기 온 몸으로 막아설 것...한병도 의원 등 삭발 서울신문</a></p> <p>한병도 의원은 “국토부와 새만금청 등은 새만금 사업의 시급성을 인정해 6626억원 규모의 예산을 기재부에 요구했으나 잼버리 파행을 기점으로 대폭 예산 삭감을 단행했다”며 “기재부는 새만금 예산 삭감 경위와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정부는 전반적인 SOC사업 타당성 재점검의 일환으로 예산을 삭감했다는 핑계를 내놓았지만, 부산 가덕도 신공항 예산 대폭 증액과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 충남 서산공항의 설계비 반영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p> <p><a href="#">4.15 총선 후보, 새만금해수유통 대다수 찬성 투데이안</a></p> <p>2020 새만금해수유통전북행동(이하 새만금전북행동)은 지난 17일 주요 정당과 후보 29명에 게 새만금 해수 유통을 공약화 할 것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주시 을 이상직 후보, 익산시 갑 김수홍 후보, 익산시 을 한병도 후보, 남원임실순창 이강래 후보, 정읍고창 윤준병 후보는 회신을 보내지 않았다.</p>	

순서	성명 (소속정당, 지역구)	구분(기준)	주요경력	선정사유	구체적인 출처	참고(2016 /2020 전력 등)
29	<p style="text-align: center;"><u>한정애</u> (더불어민주 당, 서울 강서구병)</p>	<p>가덕도신공 항 추진</p> <p>환경악법 가덕도신공 항특별법 대표발의</p>	<p>-제19,20,21대 국회의원 -보건복지위원 회, 기후위기특별위 원회 -전)환경부장관</p>	<p>- 환경부장관 후보자 시절에도 가덕도신공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대표발의까지 함. 후보자 시절 분명 가덕도 신공항 부지의 부적절성과 환경파괴의 우려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우려를 해소할 만한 그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은 채 개발주의에 편승한 모습을 보임</p>	<p><u>1.환경파괴 우려, 천천히 설명드릴 것...</u></p> <p><u>신공항법 발의 한정애 “개인 한정애와 환경부는 분리” 한겨레</u>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었던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환경 측면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환경부가 법적 절차·원칙에 따라 일하면 된다”고 2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말했다. “개인 한정애가 생각하는 가덕도 공항의 필요성과 환경부 차원에서 신공항을 검토하고 환경 평가를 하는 것은 분리되어야 한다”며 “환경부는 법적 절차·원칙에 따라 일하면 된다”고 말했다.</p> <p><u>환경장관 후보자가... 환경파괴 논란 가덕도 공항법 발의 조선일보</u> 하지만 환경 전문가들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콘크리트 등 환경 유해 물질로 섬 주변 바다를 메우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사전 환경영향평가를 간소화하는 것은 환경 파괴를 사실상 방치하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앞서 2016년 정부 의뢰로 신공항 타당성 검증을 실시한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도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자연환경에 막대한 영향을 줄 것”이라며 환경 부문에서 낙제점에 가까운 점수를 줬다. 국민의힘 등 야당도 “환경을 경시하는 사람이 환경부 장관이 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p>	

순서	성명 (소속정당, 지역구)	구분(기준)	주요경력	선정사유	구체적인 출처	참고(2016 /2020 전력 등)
30	홍석준 (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	오염수 찬동 장애인 비하	-21대 국회의원 -(전)계명대학교 특임교수 대구광역시 경제국장 -(현) 과학기술정보방 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검증 TF'	- 사단법인자연보호중앙연맹을 법정 단체로 등록하고자 시도 함. 허나 해당 단체의 성격이 매우 모호하며, 현재 총재는 건설회사 경영자임을 보아 실질적인 환경 단체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을지 의문임	1. <a href="#">k-순환경제 이행 위한 대토론회 개최</a>  <a href="#">오염수 방류 시작도 안 했는데... '생선 먹기 운동' 하겠다는 국힘 조세일보</a>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우리바다지키기검증 TF위원)이 최근 정부·여당이 계획한 '횃집 회동' 일정에 대해 "당정이 술선수범해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26일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여당이 최근 계획한 '횃집 회동'에 대해 "당정 차원에서 '우리 수산물을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술선수범하는 자세로 횃집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a href="#">홍석준 "김예지 비대위원, 몸 불편한 장애인 대표 성격" 비하 미디어스</a> "사실 또 김예지 의원도 어떻게 보면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조금 몸이 불편하신 장애인을 대표하는 그런 성격도 있다".	